

중미의 정치 변동

— 정치적 폭력에 대한 기원을 중심으로 —

곽재성

(선문대 교수, 중남미학과)

I. 들어가면서

중미는 태평양과 대서양, 북미와 남미사이에 위치하여 양 대양과 양 대륙사이의 교량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중미라 함은 과테말라 *Guatemala*, 엘 살바도르 *El Salvador*, 니카라과 *Nicaragua*, 온두라스 *Honduras*, 코스타리카 *Costa Rica*와 파나마 *Panama*를 지칭한다. 그러나 파나마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을 좁은 의미로 중미라고 호칭하는데 이는 파나마가 처한 여러 형태의 특수성 때문이다. 파나마는 스페인 식민 시대의 그란 콜롬비아 *Gran Colombia* 연방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운하건설을 목적으로 한 미국의 개입에 의해 1903년 동 연방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지리적으로도 중미보다는 남미에 속한다는 인식이 널리 형성되어 있으며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도 농업 위주인 여타 다섯 나라와는 상이하다. 따라서 중미적 현상의 한 단면을 고찰하게 될 본고에서는 좁은 의미로 중미를 정의한다. 그 동안, 중미를 대상으로 한 지역 연구는 멕시코나 남미 대륙의 諸國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사회, 경제규모도 훨씬 크고 다원화되어 있으며 미국, 유럽 등과 다원적인 관계를 유지

해 오면서 현대사의 역정을 겪어온 멕시코와 남미에 대한 연구에 비해 중미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던 점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또한 중미 연구의 후진성에 대한 현실적 요인으로는: 첫째, 중미내의 도서관, 자료센터, 연구시설이 미비하고, 둘째, 그나마 접근 가능한 자료도 부정확하여 일반화 시도와 이론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며,¹⁾ 셋째, 우리가 흔히 쓰는 ‘바나나 공화국 *Banana Republic*’이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개도국 중에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일반적 관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중미는 개별국가로든 전체로든 사회과학자들에게 상당히 흥미 있는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우선 파나마를 제외한 중미 5개국은 독립 이후부터 개별 국가가 수립되었던 19세기 중반까지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메소아메리카, 카리브해 그리고 남미가 만나는 지점으로써의 중미의 지정학적 위치는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별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것은 중앙집권화 되지 않았던 마야문명이 스페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금, 은을 비롯한 부존자원이 상대적으로 없었던 까닭이다. 멕시코 및 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미는 프랑스혁명 및 미국독립전쟁을 통해 성숙된 자유주의의 기운으로 1821년 독립했다. 그 후 멕시코로의 합병기, 중미 연합 *Central American Federation* 형성기를 거쳐 1838년에 각각의 독립정부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중미 5국의 독립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며 이 결과 국가 단위의 독립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은 개별 국가의 정체성 확보에 많은 제약을 주었다. 반면 이 기간 동안의 동등한 역사적 행보는 중

1) 이는 비단 한국에서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미연구에 있어 연구자들이 느껴야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경험적 데이터의 문제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통계자료집인 *World Handbook of Political and Social Indicators*조차 중미의 문제에 있어 뉴욕타임즈 신문의 보도를 인용하고 있을 정도이니 이들 국가들이 자체 생산한 데이터의 허구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많은 수치를 제시하면서도 이를 오직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자 하며 실증적 연구를 표방하는 그 어떤 시도도 정확한 데이터가 결여도 상태에서 무의미하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미제국들 사이에 연대의식을 심어주었고, 이 연대의식은 80년대 이후 적극 추진되고 있는 중미 통합 운동의 기본 출발점이 되었다.

둘째로, 발전경제론자들이 지적하듯이 중미 경제는 대토지경작제 *Classic Plantation Economy*의 전형과 문제점을 현대에 보여주는 귀중한 예이다. 1850년 이후 커피를 위시하여 바나나, 카카오, 면화, 설탕 등을 본격적으로 수출하면서부터 대토지경작제는 중미를 지탱하는 경제적 축이 되었다. 브라질의 경우와 유사하게 커피 재배의 확대는 토지 소유의 집중을 심화시켰고 ‘커피 엘리트’라고 불리는 신흥 귀족이 탄생되어 정치, 경제적 헤게모니를 이들이 독점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브라질과는 다르게) 산업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서구와 같은 다양한 계층분화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고 상류층과 하류층의 이중적 사회계급 분화가 심화될 뿐이었으며 1950년대 이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지방에서의 모순을 도시로 옮겨 놓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셋째로, 중미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가장 큰 축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크나큰 변수와 연관지어 찾아볼 수 있다. 중미는 지리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미국의 뒷마당 *backyard* 이라고 불리울 만큼 미국의 국익과 정책에 따라 국내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동시에 중미는 미국 대외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고 미국의 자본침투와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주요 결정요인이 상존하는 지역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연구에 있어 하나의 귀중한 사례를 제공해왔다.

중미적 현상의 마지막 특징은 정치과정에 있어서 극히 불안정한 케이스의 전형인 정치적 폭력의 문제를 대부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독립 이후 최근까지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군부 쿠데타와 독재 정권의 반복 그리고 극소수 부유층과 대다수 빈곤층간의 이중적 사회구조로 인한 정치, 사회적 불안정 등 유사한 정치과정을 거쳐왔다. 또한, 중미는 근대 국가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있어서도 군부의 비대, 중앙집권화와 권력의 무차별 남용이라는 과정을 경험했다. 1930년대까지 정보기관을 위시한 제반 권력기관이 국가예산 및 재원의 대부분을 흡수하게 되었

고 다른 모든 국가 기관의 최상위에 군림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의 경우 '군국주의'와 극악한 '정치적 폭력' 등은 지속적인 현상이 아니라 각 시대를 특징지우는 용어로 인식되는 반면에, 중미에 있어서 폭력적 지역할거주의와 정치의 폭력화는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왔다.²⁾ 이는 곧 중미의 정치적 폭력이 사회, 경제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된 구조적 요인을 바탕으로 해왔다는 점을 이미 어느 정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일반화된 여러 중미적 현상들 중에서 정치적 측면을 "위로부터의 폭력"과 "아래로부터의 폭력" 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 즉 '압제와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 중미 정치적 폭력의 기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중미의 정치적 폭력은 더욱 더 심각성을 띄고 일반화되었는데 이때 25만명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200만의 국내외 난민이 생겼다고 전해진다. 1979년에는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Sandinista* 혁명당시 수많은 희생이 따랐고,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또한 내전의 형태로 혁명군과 반혁명군의 극한 충돌을 경험하였다. 극우와 극좌파 게릴라들이 활동했던 엘 살바도르의 경우 1965과 66년에 각각 900명씩 사망한 것을 비롯하여 1977년과 78년에 각각 1,800명이 사망하였고, 또한, 1980년과 1981년에는 각각 8,000명과 13,000명이 압제와 저항이라는 틀 안에서 희생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왜 중미에서 정치적 폭력이 일반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주로 역사적 기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중미의 독립 이후인 1870년대부터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폭력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데 논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시기는 곧 중앙집권의식과 국내적 통합의 미비로 인해 국가 권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되는 시기이며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국내정치과정에 있어서 커다란 변수가 된

2) Cerdas Cruz, Rudolfo, *El desencanto democrático: Crisis de partidos y transición democrática en Centro América y Panamá*(San José, C.R., 1993), pp. 21-3; Holden, Robert, "Constructing the limits of state violence in Central America: Toward a new research agend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8:2, p. 438에서 재인용.

시기였다. 한편, 국가 권력의 약화 현상과 반비례하여 군부가 본격적 전문화, 현대화를 이룩하여 군사력과 경찰력이 국가의 중앙권력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³⁾ 국내적 합의를 도출하고 지배력을 결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국제적 갈등이 없었던 점도 중요한 이유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정치적 갈등 해소의 방법은 국가간의 전쟁보다는 국내 폭력의 방식으로 표출되었다고 봄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요인들을 제외하곤 왜 중미의 정치적 폭력이 20세기말의 오늘날까지 지속되었는가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고 정치적 폭력을 주된 테마로 다룬 연구도 매우 희박하다. 중미를 비롯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일부 국가등 정정의 불안이 일반화된 지역에서 정치적 폭력이라는 대상은,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를 비롯한 국제 민간 인권기구 및 단체들이 권위주의 독재정권들에 의해 자행된 인권 침해를 고발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써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정치적 폭력은 주로 다른 정치 사회적 현안의 '유발요인', '도구', 또는 단순한 '결과적 현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⁴⁾ 마지막으로 오노넬 *O'Donell*과 슈미터 *Schmitter*가 지적했듯이 중남미의 정치불안은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서 출발했던 탓에 군사력에 의존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주력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3) 1960년대 조차, 과테말라의 비상조치 발동권은 대통령이 아닌 국방장관에게 있었다.

4) 이러한 경향을 탈피한 선구적 논문들을 몇편 들자면 다음과 같다. Silvio R. Baretta and John Markoff, "Civilization and Barbarism: Cattle Frontiers in Latin Americ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0:4 (October, 1978); Fernando Coronil and Julie Skurski, "Dismembering and Remembering the Nation: The Semantics of Political Violence in Venezuel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3:2 (April, 1991); Robert Holden, "Constructing the Limits of State Violence in Central America: Towards a New Research Agend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8:2, 1996.

중남미의 경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연구, 민주화의 문제, 군부의 역할, 경제정책과 소득불균형의 문제 등을 위시한 거시적 연구가 이 지역의 정치변동을 연구하는데 주류를 이루었다. 이 조류 하에서 정치적 폭력은 그저 하나의 결과이자 부산물로 다루어졌고, 따라서 정치적 폭력의 기원에 관한 설명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어, 많은 학자들은 수출지향산업화전략(EOI)으로 인한 분배의 불균형이 정치적 폭력과 계층간 갈등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결론은 경제가 발전하고 계층간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정치적 폭력도 없어지리라고 내려진다. 이 접근 방식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지만 일반이론으로 발전하기엔 결정적으로 두 가지 자체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EOI 이전의 정치폭력을 설명하지 못함이고 둘은 경제 발전 이후의 폭력 또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중미의 정치적 폭력에 관한 문제가 학계의 관심을 끌게 된 것 또한 최근의 일인데, 그 주요 요인은 1980년대 미국이 관련된 일련의 폭력사태이다. 이후로 국제적 요인이 새로운 관심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정치적 폭력을 대하는 폭이 넓어졌다. 따라서, 개별 논거가 제시하는 단편성과 제한성을 탈피하기 위해선 정치적 폭력 자체를 연구의 주된 주제로 삼아 좀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설명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미의 정치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반화시도에 또 하나의 단면을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중미 정치적 폭력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위에서 제시한 ‘압제’와 ‘저항’이라는 틀 안에서 각각의 배경요인을 알아봄으로써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위로부터의 폭력: 압제

흔히 국가주도형 폭력(*state-sponsored violence*)으로 표현되는 위로부터의 정치적 폭력은 중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과테말라의 경험을 예시하며 그 전형적인 패턴을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파 독재정권이 그 동안 즐겨 사용한 ‘합법적’ 국가폭력의 주요 수단은 반공조직이었다. 1954년 아르벤스Arbenz대통령을 축출하고 미국의 후원에 의해 대통령직에 오른 아르마스대령Col. Castillo Armas은 반공법을 제정하고 ‘공산주의자’는 6개월까지 재판 없이 임의 구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당시 공산당의 당원수가 불과 4,000명이었던 반면 정부에 의해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혀 체포된 사람은 무려 72,000명에 달하였다.

둘째, 전국의 군사 조직화를 시도하였다. 심지어 군정이 아닌 민간정권 하에서도 정치적 혼란을 틈탄 국가권력은 군대의 조직으로 행정조직을 대체하기도 하였다. 최근까지 일반 경찰 조직조차도 헌법이 정한 바와 같은 내무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하부집단화 하는 행태도 보여왔다.

셋째, 군대의 반 게릴라 소탕작전을 정치적 폭력행사의 빌미로 삼았다. 게릴라와 그들의 활동을 돕는 민간인뿐만 아니라 게릴라 출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 제거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반,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몬트Rios Montt장군의 수법은 프랑스군이 인도차이나반도의 게릴라를 소탕했던 방법과 동일했다. 군부는 외진 곳에 위치한 인디오마을 거주민들을 좀더 통제하기 쉬운 도시지역으로 이주시킨다는 명분하에 마을을 불태우고 집단학살을 자행하였다. 이 결과 20만 명이 멕시코로 망명하고, 50만 명이 산 속으로 숨거나 도시 부랑민이 되었다.

넷째, 암살단Death Squad을 이용한 폭력행사이다. 군의 게릴라소탕이 주로 농촌에서 이루어졌다면 암살단은 도시의 반정부 저항자들을 겨냥해 왔다. 중남미 최초의 암살단은 1960년대 말 과테말라에서 하얀손의 전사Mano Blanca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고 첫 제거 대상은 산 카를로스San Carlos대학의 개혁파 학생과 교수, 그리고 노동, 인권 변호사들이었다. 이 조직은 1979년에 비밀반공대Ejercito Secreto Anticomunista(ESA)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여 반대당 당수들의 제거 등 본격적 정치 테러활동을 자행하였다.⁵⁾

이렇듯 국가의 물리적 통제력을 바탕으로 한 위로부터의 폭력이 오늘날 중미에서 일반화된 요인들을 크게 두 갈래로 분석해 보도록 한다: 지역주의에서 중앙집권주의로 국내정치적 축이 전이되는 과정상의 역사적 요인들을 먼저 알아본 후, 20세기에 들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던 국제적 요인에 대해 진단해본다.

지역할거주의 *Caudillismo*에서 중앙집권으로

국가 형성의 과정이 독특했던 중미는 19세기 이전까지 중남미에서 가장 지방 분권화된 지역이었고 따라서 지방 토후 *caudillo*의 권력이 막강했다. 지역할거주의를 국가폭력의 한 요인으로 지적함에 있어서 가장 주된 논점은 지방적 현상이었던 폭력이 어떻게 국가적 폭력으로 전이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지방 토후들의 군대가 어떻게 국가의 군대로 이전, 편입되었느냐의 문제로부터 군의 전문화, 그리고 제도적 성숙화에 이르기까지 '지방에서 중앙으로'를 실행한 현대 국가의 탄생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중미의 현대 국가 형성과정을 '지방분권주의에서 중앙집권주의로'라는 틀 안에서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유럽의 현대국가가 타국과의 전쟁을 통하여, 또는 국가가 다른 부문과의 오랜 기간에 걸친 투쟁과 계약에서 얻은 산물이었던 반면 중미의 경우 지방세력의 중앙편입이 특정한 시기(1870년-1930년)에만 이루어졌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의 부산물인 정치적 폭력은 잔혹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과정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전개되었는가를

-
- 5)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의 조사에 따르면 암살단의 살생부는 대통령 직속의 문서보관소 *Archivo*(대통령비서실장관 군 정보책임자에 의해 통솔됨)에 의해 작성되어 하달되며, 중요한 작전이 있을 경우에는 암살단의 활동이 최우선권을 갖는다. 이 경우 경찰을 비롯한 다른 기관은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는 엄중한 지시를 받는다. 문서보관소는 1993년 까르페오 *León Carpio* 대통령에 의해 해체되나 그 내부의 어마어마한 서류들은 아직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 (Reding, Andrew,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Guatemala", <http://worldpolicy.org/americas/guatemala.html>, p. 23, April, 1997 참조)

이해하는 것이 곧 중미의 정치적 폭력을 설명하는 한 축이 된다.

우선, '지방에서 중앙으로'라는 권력의 전이과정에서 유럽식의 계약은 없었다는 것이 한 특징이다. 즉, 중산시민계급이라는 정치적 대항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caudillo*나 지배층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의 중앙집권화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1870년 이후 농산물 수출 위주의 발전 전략은 토지와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을 대두시켰고 이는 곧 엘리트 집단의 전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한가지 특징은 엘리트의 보장된 특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인종차별주의를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중미의 인종구성성은 소수의 백인유럽이민, 혼혈인 *ladino*, 인디오로 되어 있다. 지배층의 특권유지는 부, 교육, 공공서비스 등의 백인 독점과 인디오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로 나타났다. 인디오 탄압이 가장 심했던 과테말라의 경우 먼저 인디오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동시에 거주지를 통제하는 강경한 조치와 더불어 인디오 부족의 리더들에 대한 회유정책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때론 여러 집단으로 분권화된 마야 부족들 간의 경쟁심과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인디오의 분열은 최소한 1944년까지 과테말라에서 이렇다 할 민중의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의 주된 배경이 된다.

한편, 지배엘리트의 국가 독점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했던 군대는 '국유화' — 즉, 국민의 군대화 — 되지 않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며 정치적 폭력의 수행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유럽식의 시민의식, 국가공동체의식이란 것이 싹틀 수 없었다. 물론 중남미의 시민권의 개념이 유럽과는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남미 국가에서 독립기를 통하여 쌓아올린 민족주의적 연대의식조차도 중미제국에선 찾아보기 힘들었다. 독립은 자신들이 투쟁하여 얻은 산물이 아니고 부여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중미에서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과정은 대다수 피지배계급과는 무관하게 지방에서의 지역할거주의라는 통치행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그대로 중앙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을 뿐이었다. 즉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관장하는 무소불위의 폭력이 상존하고 국가라는 유기

체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대응기관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린 중미의 현대국가 탄생과정이 오늘날 중미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폭력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⁶⁾ 중미 국가들은 1930년 이후 미국의 군사원조와 자본침투라는 외부적 변수에 본격적으로 의존하게 됨에 따라 일반 대중과의 정치적 계약의 필요성을 더욱 상실하게 된다.

중미에서 지방 실력자들의 통치기반은 자신들과 하위 계급간의 봉건적 계약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지배자는 토지, 일자리, 안전보장을 하위계급에게 베풀어주고 하위계급은 노동력, 군사력을 지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탱되어온 상호 보완적인 사회구조가 현대국가에 이르러서도 별 다른 점 없이 지속되었다. 현대국가가 일반대중을 소외시키고 중앙집권화되는 과정에서 국가와 중(하)위계급간의 협조는 필연적이며 이는 봉건적 주-종관계와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산실이 아닌 후원기관화 되고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채워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하에 국민들은 가계의 손님처럼 다루어졌을 뿐이지 권리 주장을 기초로 하는 진정한 시민권의 확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⁷⁾ 중미에 있어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위로부터의 폭력의 행사에 협력해 왔던 집단이 존재해왔다. 그러므로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이라는 결과물과 더불어 국가 폭력의 행사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고객주의 *Clientalismo* 도 그대로 전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중앙집권화를 이룩하기 시작한 중미의 국가 주도형 폭력 행사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은 우익 정권의 하수인으로 이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이 현상은 농촌을 중심으로 심한 경향을 보였다. 1970년에는 농촌 반공 조직체의 구성원 수가 삼만에 달했다고 한다. 테러리즘은 농촌을 분열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으며,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 민, 관이 하나가 된 폭력 사용이 일반화되는 양상을 띄게 된다. 엘 살바도르의 경우 준

6) 유일한 예외는 지배-피지배 계층사이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던 코스타리카에서 찾아볼 수 있다.

7) Juan Lynch, *Caudillo*, p. 406, Holden, 앞의 글 p. 442에서 재인용.

군사조직과 장비로 무장된 지역민병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의료, 국가보조금 등 물질적 혜택을 받으며 반정부세력의 제거에 일조하였다. 한편, 니카라과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유대 또는 봉건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1차적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한 준군사조직이 유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장기 집권후 산디니스타Sandinista혁명에 의해 실각한 소모사Somoza는 국가수비대National Guard의 민간 협력자들을 규합하여 극우파 푸른셔츠단Camisas Azules과 자유민족군사연맹Liga Militar Liberal Nacionalista을 탄생시켜 정권창출과 유지의 주요 도구를 이루게 했다. 각각의 집단들이 1차적 인간 관계에 바탕을 두었음은 물론이다. 한편, 온두라스의 경우 중앙의 정치가들이 수십에서 수백에 이르는 소규모 민간단체를 각처에 조직하여 선거를 비롯한 각종 정치활동을 위한 친위부대로 활용한 점이 흥미롭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조직된 정치 단체들과 지방의 무장 조직사이의 구성원과 업무의 경계가 매우 애매했다는 점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의 적용이 정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공권력)의 폭력과 국민(민병대)들이 저지른 폭력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나 국가의 비호아래 휘두른 폭력은 그것의 행사자가 국가공권력 자체이든 국민이든 위로부터의 폭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모든 사실은 국가가 지지자들과의 연합을 통하여 민중을 고립시키는 가운데 체제를 유지시켜나갔고, 국가가 방조하는 폭력에 의해 탄생한 현대 국가는 지역주의시대의 폭력적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폭력의 주체가 지역실력자Caudillo에서 국가State로 바뀌었을 뿐, 20세기에 들어서 폭력의 문화는 점점 더 공식화되고, 정교해졌으며 국가전체가 압제자와 저항자로 나뉘게 되었다.

정치적 폭력의 국제적 요인

19세기 중반부터의 중미의 역사 발전에 주요 변수였던 해외 부문들 또한 국내 정치의 폭력화에 주된 요인이 되었다. 파나마 운하 건설을 비롯한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노린 미국의 침투는 중미 국가들에 대한 직접

간섭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공교롭게도, 중미에서 현대 국가가 형성된 이 시기는 미주 대륙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이 급격히 강화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특히 미국은 친미세력의 무장화, 직접 침공, 외교적 회유와 협박 등을 통해 본격적인 중미의 지배권을 확립하게 된다. 20세기에 들어서는 미국은 경제적 이익과 파나마운하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적, 군사적 개입을 본격화하는데 이것이 곧 국내의 정치적 폭력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우선 미국은 군사, 정보, 경찰기관의 분국을 중미 각국에 설치하였다. 나카라과나 온두라스가 직접 간섭의 주 대상국이었고, 과테말라나 엘 살바도르의 경우 자국내의 권위주의 독재가 워낙 심하여 공포 속의 안정화를 이루고 있었던 덕분에 미국의 직접적 군사 행동이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정치적 폭력 현상을 심화시킨 점에 있어선 다를 바 없다. 다국적 기업인 *United Fruit Company*(UFC)와 중앙정보국CIA의 과테말라 공작을 예로 들어 미국이 관련된 정치적 폭력의 국제적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20세기 초반에 새로이 도입된 바나나는 기존의 커피와 함께 오늘날까지도 과테말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작물이다. 그러나 국내자본이 주축이 된 커피와는 달리 바나나의 생산과 수출은 UFC를 위시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철저히 독점되었다. UFC는 비단 바나나라는 작물만이 아닌 철도와 항만을 비롯한 수송시설과 유통망까지 소유함으로써 1930년경에는 과테말라 경제의 40%를 장악하기에 이르며, 이 모든 사업의 안정성은 독재자 우비꼬 *Jorge Ubico* 대통령에 의해 보장받았다. 1930년에 집권한 우비꼬는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몇 가지 친미적인 조치를 취했다. 첫째, 군의 현대화라는 명분하에 전 미국 무관을 사관학교 교장에 임명하였고, 둘째, 해외 자본의 법적, 제도적 편의 보장을 위해 기존의 대법원 판사들과 선거로 선출된 지방단체장들을 해임하고 자신의 심복들을 임명하였으며, 셋째, 안정된 노동력의 공급을 위해 소작인들이 최소 1년에 150일을 노동하도록 법정화(자작농은 100일)시킨 후 토지 소유자의 발포권을 인정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우비꼬는 태

평양 지역의 농지를 UFC에게 99년간 면세로 부여하고 수입관세도 감해 주며 안정된 노동력의 공급을 약속하는 파격적인 편의를 제공했다. 이렇듯 정부를 등에 업은 UFC는 임금 인상 요구를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하루 50센트라는 최고 임금제를 도입했고, 주요 수송수단을 독점하게 되어 노동비용을 최소화하고 가격통제력을 또한 갖추게 됨에 따라 최고의 이익을 누렸다.

그러나, 미국의 뉴딜정책, 까르테나스Cárdenas 정권이 단행한 멕시코의 석유산업 국유화, 제2차 세계대전, 파시즘의 패배 등 1940년대의 일련의 국제정세변화에 힘입은 국내의 강력한 저항으로 우비꼬 정권은 1944년 혁명에 의해 무너졌고 임시 Junta의 주관 하에 직접선거에 의거 파테말라 역사상 최초로 민선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새로이 선출된 아레발로 Arévalo대통령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법을 정비하였으며 그의 뒤를 이은 국방장관 출신의 아르벤스Arbenz대통령은 1944년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여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 개혁에 착수한다. 그는 UFC를 국유화시키지 않았으나 새로운 도로망과 항만을 건설하여 UFC의 독점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였다. 또한, 토지개혁에도 착수하여 소작농 십만 가구에 토지를 재분배하였는데, 이 정책은 대농장 *plantation* 노동력의 감소를 유발하였고 농촌 임금을 상승시켜 결국 UFC의 이익이 위협받게 되었다. UFC의 불만이 고조된 이때, 더 큰 문제는 바나나 경작지로 예정된 UFC 소유의 토지를 정부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파테말라 정부는 이 회사가 신고한 조세 기준시가와 동일한 에이커 당 3달러를 제시하였으나 (UFC는 20년전에 1.5달러를 주고 매입), 미국무성을 뒤에 업은 UFC는 에이커 당 75달러를 요구하였다. 간섭의 구실을 얻은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아르벤스정부를 공산정권으로 낙인찍고 CIA의 직접 개입을 승인했다.⁸⁾ 아르벤스는 공산주의와 아무 관련

8) 당시 미 국무장관인 John Foster Dulles는 이전에 UFC사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고 파테말라 문제에 깊이 관여한 적이 있었고, 당시 CIA국장인 Allen Dulles는 John Foster Dulles의 동생이자 또한 UFC의 고문 변호사였다.

이 없었고 과테말라의 공산당은 원내의석 10% 미만의 군소 정당에 불과했으나,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에 당면하여 할 수 없이 체코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바람에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혀 미국에 간섭의 명분을 제공했다. 1954년 미국의 공습으로 주요 군사시설과 연료고, 대통령궁이 파괴되고, 미국의 사주를 받은 용병들이 인접국인 온두라스로부터 침입한다. 아르벤스는 혁명의 이념을 보존한다는 말을 남기고 사임한 후 멕시코로 망명하게 되며 그 이후의 과테말라 근대사는 폭력, 테러, 친위쿠데타 등이 난무한 피의 역사가 이어진다.⁹⁾

1954년 아르벤스를 무너뜨린 사건이래 지난 40여 년 동안 CIA는 과테말라 정보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보조를 맞추었다. 두 집단간의 협조가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탓에 민주당 대통령인 카터Carter와 클린턴Clinton의 경우 CIA의 비밀공작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과테말라 정부의 인권 침해에 관하여 공공연히 비난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CIA의 비밀스런 개입사실은 하버리Jennifer Harbury 사건으로 최근에야 밝혀지게 되었다. 미국인 하버리의 현지인 남편인 바마까Efraín Bámaca는 CIA의 사주를 받은 알베레Alpírez대령의 명령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 사실에 놀란 클린턴 대통령은 CIA의 공작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하였고 과테말라 지부장을 해임하였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즉, CIA지부장이 정식 지휘 계통상에 있는 현지 미국 대사보다 과테말라 군부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 동안 CIA를 축으로 행해져 온 미국의 대 중미 정책이 지역내의 정치적 폭력을 조장해 왔음을 증명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주종을 이루었던 직접 개입에 더하여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가 안보이론의 주입, 그리고 독재정권의 조종과 경제 원조를 통한 미국의 간접 개입이 1945년 이후 새로운 수단이 되었다. 1959년의 쿠바혁명은 미국의 간접 개입을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을 위시하여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9) Reding. Andrew, 앞의 글, pp. 5-7 참조.

경제 원조가 기존의 군사 원조와 더불어 대폭 지원되었고 특히 1980년에는 ‘중미공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막대한 달러가 중미에 유입되었다. 중미의 정치적 폭력에 대한 미국의 간접적 요인 제공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의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미주교육원은 중남미의 정치 폭력을 조장해온 또 하나의 주범으로 밝혀졌다. CIA가 고문과 살인을 자행했던 정보기관 내외에서 교육, 훈련, 군수물자 지원 등을 비밀리에 담당해 직접적으로 위로부터의 정치적 폭력행사에 간여해왔다면 미주교육원 *US School of the Americas(SOA)*은 중남미의 군 장교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여 교육하여 왔다는 점에서 중미의 정치적 폭력에 간접적인 요인을 제공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SOA는 미주지역안정화에 기여하고 미군의 정글전투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하에 1946년에 파나마에 처음 설립되었다. 파나마운하조약에 의거 1984년에 미국 조지아의 포트 베닝 *Fort Benning*으로 옮겨지는데 당시 SOA는 파나마 언론으로부터 ‘암살 학교’ *The School of Assassins*라고 비난받을 정도로 많은 반발에 직면하고 있었다. SOA가 비난받는 이유는 그 졸업생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국가원수급 인사들만 나열하여도 아르헨티나의 갈띠에리 장군 *General Galtieri* 볼리비아의 반세르 장군 *Gen. Hugo Banzer* 파나마의 노리에가 장군 *Gen. Manuel Noriega* 그리고 로메로 주교의 암살을 지시한 당사자였던 엘 살바도르의 두빅송 대령 *Roberto D’Aubuisson* 등이며 위에서 언급된 과테말라의 알빠레스 대령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SOA의 피해당사자로 여겨지고 있는 나라는 바로 과테말라이다. 지난 40여 년간의 내전 동안 20만 명 이상이 살육당한 과테말라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장교들은 대부분 SOA에서 교육받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UN 진실위원회 *United Nations Truth Commission*가 학살의 주모자로 지목한 군 정보부대장인 까예하스 장군 *Manuel Antonio Callejas y Callejas* 장군이다. 또한 “복종하는 자에겐 식량을 나머지에겐 총알을”이라고 주장하며 현대사에서 가장 잔혹한 독

재자로 군림했던 리오스 몬트 대통령 *Jose Efrain Rios Montt* 도 SOA 출신이다.¹⁰⁾ 동 위원회의 1993년 보고서에 따르면 엘 살바도르에서 10년간의 내전기(1981-1989) 동안 살육을 저질렀던 60명의 군 고위 간부중 75%가 SOA의 졸업생이었다.¹¹⁾

SOA의 교육은 국가안보론 *National Security Doctrine*에 입각하여 주로 비 정규전 전술 *Low Intensity Conflict(LIC)*을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반 게릴라 전술, 도시 게릴라 소탕 전술; 비 정규전 및 침투임무; 요인암살; 특수임무; 정보, 심리전(PSYOPS: psychological operations) 등이 주된 교과목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중(남)미의 정치적 폭력현상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가 오늘날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SOA 동정론자들의 논리는 SOA가 민주화에 기여한 결과 중남미에 독재정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인구에 회자되는 악명 높은 인사들은 전체 졸업생의 1%에 불과하며, SOA는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중시한다는 것이다.¹²⁾ 그러나 비판론은 중남미에서 독재정권이 자행한 폭력행위는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던 1970년대에 많았고, 민주화는 다른 요인들로 이룩되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반 게릴라 전술의 원칙을 비롯한 교육 내용은 간접적으로 폭력을 조장한다는 논리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왔다.¹³⁾ 비판론이 결정적으로 설득력을 얻게 된 계기는 1993년 파라과이에서 3톤 분량의 SOA 비밀교본이 발견되면서부터였다. 이 교본은 피의자에 대한 전기 고문법을 위시한 다양한 지침을 담고 있어 SOA가 중남미의 폭력화와 인권유린에 어느 정도 책임이

10) “School of the Americas” [http://www.infoasis.com/people/stevetwt/US_ThirdWorld/SOA.html]

11) Bell, Maryannl, “RE: SOA” [mabell@provos2.prov.sunysb.edu, LASNET @mcfceley.cc.utexas.edu, 22 Feb. 1995.]

12) 다수의 비판 의견에 맞서서 SOA를 주로 방어해온 마텔 *Martel* 소령은 “야마모토가 하버드대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하버드가 일본의 진주만기습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서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13) Policzer, Pable, “SOA”, [policzer@mit.edu, lasnet@mcfceley, cc, utexas, edu]

있다는 비판론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미군 당국과 중남미 군사정부 간의 협조체제를 밝혀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¹⁴⁾ 미국의 역할이 어느 정도이고 중미국가의 물리적 증강에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미지수이지만, 무엇보다도 SOA의 기본 교육 방침인 국가안보론이 외부와의 물리적 갈등이 결여된 중(남)미적 상황에서 결국 내부의 적에 대한 전략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SOA의 책임론은 더 큰 타당성을 갖는다. 물론 중남미 군부의 대내적 폭력화에 대한 여러 요인중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¹⁵⁾ 90년대 중반에 들어 코스 수강생의 양심선언을 비롯하여, 국회의사당 데모, 인터넷에 반 SOA 사이트 개설, *L.A. Times*나 *New York Times* 등의 유력지에 이 학교를 비난하는 사실이 실리는 등 반 SOA정서가 폭넓은 지지를 받아 1996년 케네디 *Joseph Kennedy* 상원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상하의원이 SOA 폐교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바 있고 현재 미국 내에서 이 학교의 존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¹⁶⁾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중미의 위상은 전반적으로 중요성을 상실했다. 최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급감했는데 엘

14) Bell, Maryann "SOA torture Manual" [mabell@provos2.prov.sunysb.edu, LASNET@mcfeeley.cc.utexas.edu, 22 Feb. 1995]

15) SOA에 대한 또 다른 비난의 논거는 미국이 전 중남미에 산재한 동창조직을 통해 작전 및 무기구매 등의 군사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군부에 행사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SOA의 동창조직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남미 각국의 정보기관 사이의 비밀조직으로 알려진 암호명 「콘돌작전」, *Operación Condor*도 흥미있는 연구의 대상이다. 아직 전모가 파헤쳐지지 않고 있는 이 국제적 네트워크는 독재정권기의 반체제인사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갔을 경우 정보기관간의 협조로 비밀리에 다시 잡아오거나 제거하는 목적을 띠고 있었고 민주화된 오늘날에는 과거지사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한 각국의 정보원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숨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알려져 있다.

16) 이 논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지아주의 SOA 주변에선 폐교를 주장하는 시위대의 데모와 물리적 진압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에 체포된 이들의 사법처리 문제가 미국내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살바도르에 대한 원조의 경우 한때 공산주의와의 대항을 위해 하루 평균 150만 불씩 지원되던 것이 1996년에는 일년에 불과 500만 불로 줄어들었다.¹⁷⁾ 이는 곧 국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정치적 폭력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국제적 요인이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냉전 이후 중미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비정치적인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었다. 1997년 5월 미 국무장관인 울브라이트가 과테말라를 방문한 목적은 미국에서 도난 당한 차량에 대한 유통 경로의 추적에 중미정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클린턴 행정부의 전직 국무장관이었던 워렌 크리스토퍼 재임시부터 범죄, 마약, 환경 등의 문제가 미국과 중미간의 관계에 있어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990년대 이전까지 위로부터의 정치적 폭력에 대한 국제적 요인은 주요 변수로 작용했었지만 동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사라진 오늘날은 중요성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다.

Ⅲ. 아래로부터의 폭력: 저항

아래로부터의 저항의 문제는 최근의 경제 성장이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격렬한 사회적 저항을 낳았다는 구조주의적 해설이 지배적이며 중미의 경우 위로부터의 정치적 폭력에 대한 반작용적 저항이라는 측면도 강조되어 왔다.¹⁸⁾ 즉, 저항에 관한 일반이론에 덧붙여 중미의 특수한 상황이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일반이론의 핵심: 첫째, 농경사회가 국제자본주의 체제 속으로 편입되면서 단일 작물의 수출에 국가 경제가 의존하게 된 결과 종속이 심화됨으로 인하여 모든 사회, 경제문제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

17) Washington Post, [<http://www.washingtonpost.com>, May 8, 1997]

18) Booth, John, "Socioeconomic and Political Roots of National Revolts in Central Americ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26:1, 1991, p. 34.

이고; 둘째, 국가는 조직화된 반대그룹의 표적이 된다는 국가이론 *State Theory*의 가설이다. 두 가설은 순차적으로 상호 보완성을 띄고 있다. 즉, 분배의 문제가 조직화된 대중집단을 잉태했고 그들의 목표달성은 체제 내에서의 합의가 아닌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표출된다는 것인데 이 가설을 중미의 사례에 적용해 보도록 한다.

중미는 식민시대부터 농업 생산물의 수출에 국부를 의존했던 지역이다. 1850년 이후 커피가 제일의 수출품으로 등장하였고, 바나나, 카카오, 면화, 설탕 등이 기타 주요 산물이었다. 1차 산물 수출위주의 국가 경제구조는 국제시장 가격의 등락에 의해 영향받았다. 커피의 생산증대는 브라질에서와 마찬가지로 토지와 노동력의 집중현상을 심화시키고 산업화를 더디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약 100년간에 걸쳐 진행된 이 과정과는 달리, 농작물 수출이 급격히 팽창된 시기인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짧은 기간동안 이룩된 자본집약적 산업화는 사회 경제적인 변혁을 수반하여 농촌 소작농과 도시 프롤레타리아들을 다량으로 발생시켰다. 산업화에 힘입어 문맹률이 감소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팽창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의 외형적 규모가 증대되었다. 어느 정도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1950-60년대의 곡물, 면화 증산(또한 수출증대)과 1960-70년대의 목축업의 증대(또한 수출증가)로 인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소규모 자영농이 감소하고 이들이 기업형 자본가에 흡수되면서 농촌의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였다.¹⁹⁾ 또한, 농촌잉여노동력이 발생하면서 도시이주가 가속화되어 하층민의 실업의 문제는 물론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다. 더욱이 1970년대의 유가인상과 인플레이션은 실질임금의 하락을 부채질했고, 임금의 하락은 곧 대중의 불만으로 이어져 정치적 반대세력이 결집되고 반국가세력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농지개혁이나 효과적인 임금정책을 위시하여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며 오히려 중

19) 소유와 생산에 있어 수출위주의 농업구조재편은 결국 국내 식량생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수입식량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했다.

미 국가들의 정책은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을 하였다.²⁰⁾ 단적인 예가 바로 중미자유무역지대(CACM)의 창설이다. CACM은 지역경제통합, 해외투자유치, 역내무역활성, 산업화 등을 목표로 하여 자본주의적 생산과 수요의 증대를 꾀한 탓에 국내총생산 및 1인당 국민소득 등을 단기적으로 증가시켰으나 무역조건의 악화, 높은 이자율, 1차 산물의 국제시장가격 하락 그리고 세계적 불경기로 인해 각국의 거시경제지표는 1970년 말에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의 편중은 더욱 심해질 따름이었다. 또한, CACM의 수출지향정책은 UFC의 경우와 같이 도시와 농촌 노동자의 실질 임금의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니카라과,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의 경우 실업률의 상승, 부의 편중, 민중의 삶의 질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더욱이, 1970년대 말의 불황은 부유층의 사업에도 타격을 주어 중미 전체에 있어 국가 경제의 존망이 위협받는 잃어버린 80년대를 맞게 된다.

이상과 같은 구조적, 정책적 테두리에서의 설명은 중미의 거의 모든 국가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개별 국가가 체제의 테두리 내에서 걸은 특수성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더 극명하게 일깨워 준다. 과테말라의 토지 문제를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1993년을 기준으로 과테말라는 외화수입의 60% 이상을 농작물의 수출을 통해 획득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국가 경제의 토지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작 가능한 토지가 충분한 것은 아니다. 전 국토의 12%만이 이용 가능하며 높은 인구밀도에 더하여 년 2.5%에 달하는 인구성장률로 인해 토지에 대한 희소 가치가 매우 높고 따라서 전 인구가 토지에의 집착력이 매우 강하다. 더 큰 문제는 과테말라의 부의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토지소유의 불균형에 있다고 할 정도로 토지의 분배구조가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상위 2%가 무려 72%의 경

20) 국가이론의 가설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일 경우 반대파는 누그러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 반대항쟁은 거세어진다고 한다. Booth, 앞의 글, pp. 35-36 참조.

작지를 소유하고 전체 농업 생산의 92%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인디오가 대부분인 소농의 경우 전체 농업 생산의 4%만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이 나라의 토지 분배구조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²¹⁾ 오늘날의 문제는 중미의 독립시대에서 유래한다.

자유주의파와 보수주의파의 갈등이 심하던 시기인 1829년, 자유주의 정권은 등재되지 않은 인디오 소유의 모든 토지를 몰수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사건은 라디노인 라파엘 까레라 *Rafael Carrera*를 지도자로 하는 혁명의 발발동기가 되었다. 수도를 점령한 까레라는 중미연합에서 과테말라를 탈퇴시키고 멕시코의 사빠따 *Emiliano Zapata*에 비견될 만큼의 친 인디오정책을 수행한다. 그러나 1865년 인디오의 보호자였던 까레라가 사망하자 그들은 토지 소유권을 점차 잃어가기 시작했다. 바로스 *Justo Rufino Barros*를 위시하여 이후에 집권한 자유파들은 까레라식의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는 곧 군의 현대화라는 방향으로 특징지워진다. 새로운 체계의 군 사관학교가 세워지고 각종의 개혁 조치들이 뒤따랐다. 군 입대는 혼혈인들인 라디노 계층에게 가장 용이한 신분상승 수단으로 여겨졌던 관계로 당시까지 인디오에 동정적이었던 라디노들이 인디오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지배자-피 지배자 신분구도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일부 라디노들도 가세한 인디오 탄압정책이 본격화되었다. 토지의 몰수가 빈번히 이루어졌고; 인디오 선교를 담당한 선교사들이 축출되었으며; 인디오 지역의 공공건물도 국가에 강제 수용되었다. 무엇보다도 인디오의 자급자족을 위한 소규모 경작에서 커피를 위시한 수출작물의 생산을 위한 대규모 경작으로 농업생산구조가 바뀜에 따라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토지가 재분배되었고 따라서 토지를 잃은 농민의 수는 급격하게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저항도 용인되지 않았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화된 군에 의하여 무차별 진압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물리적 탈취의 형태이거나, 또는 기업형 자본

21) Reding, 앞의 글, p. 19.

가의 득세와 자영농의 몰락에 따른 중심부-주변부 구도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분배의 왜곡이지만, 사기를 통한 갈취도 성행해왔다. 과테말라의 토지 등기절차는 다수가 문맹인 인디오들에게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복잡하다. 이 틈을 탄 지주들은 부패한 공무원과의 결탁을 통해 (뇌물이라는 수단으로써) 합법적으로 서류를 꾸며 인디오의 토지를 갈취해 왔다. 땅을 빼앗긴 인디오는 정글지대로 이주하여 새로운 땅을 개간하지만, 개간된 땅을 또 지주들에게 갈취당하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삼림파괴와 생태계 훼손 등의 환경 문제 역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왜 인디오들이 소작농으로 남아있기를 거부하고 굳이 새로운 토지의 소유를 위하여 힘든 이주의 길을 택하느냐에 관해선 문화적 해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디오들에게 있어 토지는 단순한 생산 요소가 아니고 인간으로써 가져야 할 필수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이 땅에서 생산된 옥수수나 그들에게 있어 인간, 지구, 창조를 이어주는 근원적 상징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나의 곡물 이상의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이 점은 과테말라에서의 토지개혁이나 그에 연관된 경제적 재화의 분배가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설명되어서는 않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중미에 있어 소득 불균형과 빈부의 차이는 단순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가르는 경제력의 경계선을 형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종간의 갈등구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즉, 소외계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디오에 대한 공공연한 인종차별이 소수의 백인 엘리트들에 의해 오랜 시간을 두고 광범위하게 자행되어 왔다. 과테말라의 경우 인구의 55%가 인디오; 42%가 혼혈인 라디노 *ladino* 그리고 백인의 인구는 불과 3% 미만에 불과하다. 각 인종은 피부색뿐만 아니라 언어와 의복으로도 구분된다. 백인 지배층에게 있어 인디오는 더럽고, 게으르며, 잔인하고, 열등한 인종으로 인식되어 왔고 따라서 인디오에 관한 차별은 일반화되었다.²²⁾ 이에 더하여, 계층간의 경제력 분화현상은 인디오들이 지배계

22) 마야식 지방분권주의의 구습이라고 설명되는 인디오 각 집단간의 경쟁의식과 문화적 통합의 결여는 백인들이 인디오를 멸시하는 무시 못할 요인이다.

층에 대한 거부감을 더하고, 백인들에게 있어 하층 인디오들에 대한 멸시와 차별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성장의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의 토지 소유 불균형 구조가 바람직한 점은 다수의 농민들에게 쪼개어 토지를 분배했을 경우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배의 문제에 있어 과테말라는 중남미에서도 가장 왜곡된 구조를 보이는 나라임을 감안할 때, 생산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개혁을 통한 어느 정도의 분배를 시도해야 할 당위성을 부인할 순 없다. 현재, 과테말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74개국 중 85위이지만, 사회지표인 HDI(Human Development Index)는 11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주 대륙에서 두 지표간 가장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지표간의 차이가 클수록 거시경제 수치가 의미를 상실한다는 점에 비추어 과테말라의 경험은 중미가 당면한 분배의 위기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미의 소득 및 토지소유의 불균형은 중미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고 나서 한창 붐을 이룰 때인 1970년대에 심화되었다. 니카라과의 경우 1977년에 상위 5%가 60%의 국부를 독점한 반면 하위 50%의 소득은 15%에 불과하였고, 엘 살바도르의 경우 정부의 소농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의 비율은 1961년의 12%에서 1971년에는 41%로 증가하였다.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토지소유의 형평을 이룬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그 양상은 서로 다르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대토지소유제가 뚜렷하지 않은 전통 하에서 1974년부터 1978년까지의 토지개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룩했다. 온두라스는 1970년대 중미의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도 덜 심화된 양상을 보여왔을 따름이다. 이는 곧 토지의 불균형적 분배가 (특히 농촌의 경우) 농민 반란 등의 정치적 불안을 낳았다는 논리가 일리는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강조보다 근본적인 질적인 요소의 고려를 통해 개별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사례이다.

공교롭게도 분배의 왜곡을 심화시킨 경제변혁의 시기인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는 동안 중미의 5개국에서는 사회 민주운동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1970년대의 민중의 저항과 부의 편중문제는 관련이 있는가? 라는 문제는 단계적으로 보면 연관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제력이 한계에 달한 소외계층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무장투쟁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중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선 그들은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공공단체에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청원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직화를 시도하여 비 폭력적인 방법의 시위라든지 파업을 감행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경우 민중은 자신들 스스로 또는 기존의 반정부조직의 후원으로 게릴라 활동을 비롯한 무장투쟁에 돌입한다. 이 과정을 통해 탄생한 대표적인 조직이 1974년 엘 살바도르에서 노조, 농민조직, 학생운동그룹, 교원노조, 공산당 등이 주축이 된 FAPU(*Frente de Acción Popular Unida*)라는 집단이며 그 이후에도 5개의 게릴라 그룹이 형성되었다. 한편, 초기 단계의 조직화에 일조한 대표적인 단체로 니카라과,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 활발한 활동상을 보였고 개혁적 카톨릭 성직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인 CEBs(*Comunidades Eclesiales de Base*)를 들 수 있다. 민중의 폭력적 저항을 후원하였던 기존 조직으로는 니카라과의 사설 연구소인 INDE(*Instituto Nicaraguense de Desarrollo*)와 잘 알려진 게릴라 조직인 FSLN(*Frente Sandinista de Liberación*)을 꼽을 수 있다.

니카라과와 엘 살바도르의 경험은 단계적 폭력화론을 뒷받침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이며 다른 나라의 경우 양상은 매우 다르다. 우선 정치적 안정화를 이룩했고 분배의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에서 민중의 저항은 사회 운동의 선을 넘지 않았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중도파들이 오랜 동안 집권해왔고 극좌, 극우파가 득세하지 않았던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1970년대 초부터 민주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지만 각 지역에 구호기관을 설립하는 등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힘입어 안정화를 이룩하였다. 온두라스의 경우도 1960년, 1970년대에 민중운동이 활성화되지만 조직화되지 못한 탓에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없었다.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1980년 선거에서 자유당이 승리하자 군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비록 제한적이지만) 권력을 양도하는 결단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군부의 적절한 대응이 민중의 저항을 감소시켰던 요인이 되었음은 물론이다.²³⁾ 그러나 과테말라의 경우 어느 국가보다도 분배의 문제라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어 혁명의 기운이 드세었지만 1954년이래 정부의 감시와 탄압이 극심해진 탓에 민중항쟁의 강도는 니카라과나 엘 살바도르보다도 오히려 덜 하였다. 따라서 과테말라에 있어 정치적 폭력은 민중의 저항이라기보다는 군부에 의해 자행된 일방적 탄압의 형태로 주로 나타났다.²⁴⁾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각국의 차별화된 경험은 민중의 저항의 정도나 성공여부를 가르는 또 다른 기준점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 따라 민중의 저항도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첫째,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정책을 펼 코스타리카의 경우 민중운동은 폭력화되지 않았고, 둘째, 정부의 감시와 탄압이 심했던 과테말라에서도 폭력화된 민중 운동은 쉽게 진압되어 저항의 문제는 심각하게 표면화되지 않았다. 세번째, 위의 어느 경우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적 대처가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이거나 정부의 폭력적 탄압이 정교하지 못했던 엘 살바도르와 니카라과에서 민중의 폭력적 저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드세었다.

23) 군부의 후견 하에 민주주의(protected democracy)로 이행된 온두라스의 정치 과정은 다음의 글에서 잘 분석되어 있다. Ruhl, Mark, "Redefining Civil-Military Relations in Honduras",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38, No. 1, pp. 33-66, 1996.

24) 1980년대 초반 정부전복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게릴라 활동이 활발해지자 과테말라의 루카스 가르시아(Lucas Garcia) 군사정권은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여: 무려 10만명의 빈간인을 죽였고 400여 마을을 파괴했으며 17세에서 70세까지의 모든 인디오들을 국가민병대에 강제로 편입시켰다. (Reding, 앞의 글, p. 30.)

결론적으로, 1970년대 이후의 중미 현대사에서 민중의 저항이 표출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왔다고 볼 수 있다. 해외자본의 유입과 CACM 등을 통한 외형적 경제성장은 토지 소유의 불균형, 소득 불균형, 실질 임금의 하락의 역기능을 낳았고 분배의 왜곡 및 생활 수준 하락에 따라 민중은 조직화의 단계를 거쳐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중 저항의 폭력화 여부와 정도 및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는 바로 각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였느냐는 것이다.

IV. 결론: 평화의 길과 문제점

지금까지 중미적 현상의 중요한 부분인 정치적 폭력의 기원을 압제와 저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역사적, 구조적, 국제적 관점에서 밝혀보았다. 그러나 ‘압제’와 ‘저항’간의 상관 관계를 굳이 밝혀려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시도이다. 왜냐하면 중남미에 있어 정치적 폭력의 두 주체인 정부군과 민중(게릴라)간의 극한 갈등 속에서 ‘누가 먼저인가?’를 파헤치는 시도가 끝없는 논쟁을 낳았던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중미는 표면적인 민주화와 안정의 정도를 넘어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첫째, 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해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고, 둘째, 이미 사회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 숭배 현상을 불식시켜야 한다.²⁵⁾ 셋째,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외받는 계층인 인디오들에 대한 올바른 정책수립과 의식개혁이 있어야 한다. 넷째, 효과적 안정을 이룩하는데 필수적인 경찰력을 전문화시켜야 하고 군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처우 개선을 통해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조직과 장비의 선진화를 통해 시급히

25) 과테말라에선 헌법에 의해 무기류의 소유와 소지가 보장되어 있다. 1992년 통계에 의하면 인구 십만 명당 34명이 매년 살해당하여 미주전체에서 최고의 살인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이 10명임을 감안할 때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경찰력의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숙제에 앞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바로 쓰라린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든 치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선, 과거의 정치적 폭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리고 관련자 처벌 등을 모두 포함하는 청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미가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폭력을 자행했던 자들에 관한 처벌에 관한 것이다. 과테말라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정치작업은 평화의 기초를 다진 전직 대통령이며 인권운동가인 라미로 데 레온 까르빠오 *Ramiro de León Carpio*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우선 모든 정치테러의 주범이었던 대통령 직속기관인 안전국 *Archivo*을 폐쇄하고 경찰을 군부로부터 독립시켰으며 과테말라 각지에 배치된 군사위원회를 철수시켰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을 뿐 실제 정치적 폭력을 자행한 인물들의 처벌 작업은 늦어지고 있어 오늘날까지 과테말라에서는 약간 명만이 기소되었을 뿐이다. 우선, 과거 청산을 위한 법적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소급 적용의 금지를 명시한 「국민 총 화합법」이 중도좌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에 의회를 통과되자 관련자 처벌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반군과의 평화조약에 의거 창설되어 내전기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자 설립한 「역사 바로세우기 위원회」는 겨우 미화 5만 불의 예산으로 단 세 명의 위원이 6개월 동안 활동하였을 뿐이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폭력의 책임자를 밝히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탓에 본 위원회는 제 구실을 못하고 말았다. 이러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는 대조적으로 민간조직(NGO)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이들 중 특히 카톨릭 교회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보조를 받는 조직들의 활동이 각각 두드러지는데 “The Project”라는 이름의 후자는 지금까지 483건의 집단학살 사례, 300여개의 비밀 매장소를 밝혀내었다. 과테말라의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NGO의 숫자는 27개에 달하며 이들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작업을 통하여 조사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조사와 활동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당사자인 정부와 국

민들의 과거 청산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다면 어렵게 성취한 평화는 항구적이지 아닌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 중미가 안고 있는 딜레머이다. 즉, 반군은 총을 놓았고 포성은 멈추었지만 관련자 처벌과 희생자 보상을 위시한 산적한 문제가 상존하는 한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 국가에서 국내적 불안이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오늘날에도 인권운동가, 인디오그룹, 언론인, 법조인, 학생 등 개혁적 성향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미, 특히 과테말라에서의 내전은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 중에서도 UN 과테말라 인권위원회(Minugua)가 펴낸 보고서의 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이 글을 마감하고자 한다.

“현재 과테말라에서 대부분의 중범죄와 인권침해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것은 범법행위자체를 국가가 알지 못하거나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즉, 이것은 곧 사법 기관의 무능력과 비효율성, 그리고 이를 방해하고자 하는 힘있는 반동세력의 존재로써 설명될 수 있다. 그들은 범죄와 인권침해를 계속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 행위에 대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정치 권력과의 연계를 지속하려 노력할 것이다.”

— 1996년 7월 19일 UN 과테말라 인권위원회

Bibliography

외무부, 『중미개황』, 1996. 7월.

Bell, Maryann, “RE: SOA” [mabell@provos2.prov.sunysb.edu, LASNET@mcfeeley.cc.utexas.edu, 22 Feb. 1995.]

Bell, Maryann “SOA torture Manual” [mabell@provos2.prov.sunysb.edu, LASNET@mcfeeley.cc.utexas.edu, 22 Feb. 1995]

Booth, John, “Socioeconomic and Political Roots of National Revolts in Central Americ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26:1, 1991, pp. 33-73.

Brockett, Charles, “Measuring Political violence and Land Inequality in Central Americ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1, 1992

Holden, Robert, “Constructing the Limits of State Violence in Central America: Towards a New Research Agend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8:2, 1996, pp. 435-459.

La Rue, Frank, “The Right to Truth in Central America”, in Rachel Sieder(ed.), *Impunity in Latin America*,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London, 1995, pp. 73-81.

“Los derechos humanos, tan conocidos y tan poco respetados” [http://www.us.net/cip/cdh/1210.htm]

Policzer, Pable, “SOA”, [policzer@mit.edu, lasnet@mcfeeley, cc, utexas, edu]

Reding, Andrew,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Guatemala”, [http://worldpolicy.org/americas/guatemala.html, April, 1997]

Ruhl, Mark, “Redefining Civil-Military Relations in Honduras”,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38, No. 1, pp. 33-66, 1996.

“School of the Americas” [http://www.infoasis.com/people/stevetwt/US_ThirdWorld/SOA.html]

Walter, Knut and Williams, Philip J, “The Military and Democratization in El Salvador”,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35, no.1

Washington Post, [<http://www.washingtonpost.com>, May 8, 1997]

Woodward, R.L., “Central America from Independence to c. 1870”, in Bethell, Leslie(ed.) *Cambridge History of Latin America*, Vol III, Cambridge, 1985, pp. 471-506.

【Abstract】

Origins of political violence in Central America: State-sponsored repression and popular revolts

Prof. Jae-Sung Kwak
Dept. of Latin American Studies
Sunmoon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origin of the popular national revolts as well as the state-sponsored violence in Central America. Political violence has permeated the Central American landscape for much of its history. Of the Central American republics, Guatemala, El Salvador, and Nicaragua have suffered most from violence in recent decades. This analysis of violence has emerged from an array of disciplines ranging from ethnohistory to political economy and has focused on subjects as divergent as international factors, cold war politics and the problems of land tenure. In treating state-sponsored violence,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a description of the mechanisms by which *caudillos* violence was transformed along with its typical legacy of clientalism. International factor as the more contemporary source of the violence is then discussed: the direct intervention of the US military and security forces, and indirect role of the School of the Americas. Washington's subsequent modernization and expansion of the region's military and police forces decisively enhanced the capacity for state violence. As for the issues of the popular political mobilization and the violent expression of mass discontent, such variables as

ethnohistory, political economy and government' counter-action are regarded as main determinant factors.

These violent upheavals exhibit many common features but also important differences amongst the Central American states. For instance, violence has been relatively constant in Guatemalan politics. Since colonial times, it has been motivated at least in part by radical and ethnic conflict. Acting on behalf of a Hispanic and European economic elite, the state has used its repressive capacity to control the Mayan and *ladino* majority. This repression has engendered a long history of indian uprising and resistance, which has in turn exacerbated the paranoia of Guatemalan elites and their repression of indigenous people. The fact that mass mobilization has been brutally repressed can more or less explain the relative lack of violent resistance in Guatemala. On the other hand, those countries such as Nicaragua and El Salvador have shown more conventional pattern of the co-existence between state-sponsored violence and revolutionary movements.